

노사정위원회 활동 평가와 향후 전망

외국의 경험에 빗대 타협주의 모델이니 조합주의 모델이니 하는 다양한 분석이 난무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염연히 한국 상황의 산물이다. 노사정위원회에는 정권과 자본의 '음모'와 '마각'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지난 10여년간의 노동·자본·국가의 갈등과 타협의 흔적이 진하게 배여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서구 '시민주의' 모델과 남미 '민중주의' 모델을 흡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계급지형과 역학관계 위에서 있다.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활동과 향후 전망을 싣는다. — 편집실

이병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노사정위원회의 탄생과 그 배경

올해 들어 노사관계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다름아니라, 노동·자본·정부 3자간의 정책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성장 제일주의의 가치아래 국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 노동이 철저히 통제·배제되었던 권위주의적인 개발독재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계의 대표(양 노총)가 대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사회·경제 및 노동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해 경영계와 정부의 대표들과 열띤 토론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사회적 협의의 공간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열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회민주주의적인 전통이 깊게 뿌리 내린 서구 국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현재 우리에게도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실험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판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되었는가? IMF 경제위기와 DJ의 통치철학 그리고 노동운동의 힘이라는 세 가지의 요인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탄생을



힘의 무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 치명타를 가칠 수 있는 조직력을 노동계가 갖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계를 적극 들어들이려는 이유이다.

간추려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6.25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비유되는 지난 연말 이후의 경제위기는 그 동안 국가 권력과 재벌 간의 긴밀한 유착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기 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된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은 경제 파탄의 일차 책임자로서 정부와 재벌에 대한 개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둘째, 이러한 사회 개혁의 추진에 있어 과거와 같이 (예: 5공화국 초기) 노동

을 아래 배제하느냐 또는 새로이 참여시키냐 그 여부는 통치권자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터인데, 지난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룬 DJ는 노동의 일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선택을 하였다. 실제, 당선 직후 DJ는 양 노총의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IMF체계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체"의 구성 및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아니라, 2월의 취임식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이념을 밝힘으로써 노동의 정체 참가를 포함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셋째, 아무리 경제위기 조건 속에서 그리고 통

치권자에 의한 '선의'가 존재하였더라도, 노동운동의 힘이 별 불일 없었으면 정부로서는 노동계와의 끌치아픈 협상을 아예 제도화하게 되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노동운동이 노·사·정간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최소한 (지난 해 노개투 총파업에서 판명되었듯이) 위태로운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직적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에 노동계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로서는 대량 실업과 임금 삭감 등과 같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것이다.

이와 같이, 이를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난 1월 중순에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 (1기) 노사정위원회이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은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고정불변의 조건으로 존재하였기 보다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전개되고 있는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여전 변화에 의해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일정하게 한계지우는

■ ■ ■ ■ ■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협안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및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상설화된 기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현재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위치지워진 노사정위원회는 1993~5년 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던 한국노총-경총간의 중앙교섭이나 95년이후 노동법개정을 위해 노·사·공약대표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와는 달리 경제·사회·노동분야의 다양한 정책협안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및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상설화된 기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노사정위원회는 무엇을 해왔는가?

지난 1월 15일에 출범하여 26일 동안 짧게 활동하였던 1기 노사정위원회는 총 26회의 각급 회의(본위원회 6회; 기초위원회 10회; 전문위원회 10회)를 거쳐 당시 심각한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사·정의 공동 의지를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 선언문"(1월 20일과 2월 6일)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90개 협의사항 및 21개 2차 협의과제를 포함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월 9일)을 도출하였다.

노·사·정 3간의 합의를 통해 사회협

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10대 의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회 협약에는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신정부측이 요구하고 제안하였던 중요한 정책 현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사회협약에 대한 합의는 당시 노사정 위원회의 협상을 주도하였던 신정부측과 노동계 대표간에 9개의 핵심 쟁점에 대한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였다. 2월 6일의 대타협을 통해 신정부측은 IMF와의 협약사항이었던 고용 조정(정리해고) 관련법제 개정과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을 관철하였던 반면, 노동계는 그 보상으로서 실업대책 재원 확대(5조원),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삭제 및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에 대한 자자체로의 이관 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월 20일 공동선언문의 발표에 관련된 부대결의로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위한 노동부장관의 특별담화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사회협약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는 합의 사항에 대한 노동

계(특히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1기의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으며, 한동안 노·정간의 대립국면이 유지됨에 따라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5월 말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과 정부가 6월 5일에 현안문제들에 대한 전격 합의를 이룸으로써 6월 초부터 2기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정상화되었다. 6월 중에 내부 운영체계를 새롭히 정비한 2기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와의 협의 요구를 받아 들여 우선 6월 말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와 '은행산업 발전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에 대한 노동계의 계속되는 요구에 따라 7월 초부터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계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7월 10일에 공공부문과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담을 항의하며 양 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게 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다시금 공전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7월 22~23일 동안 또 한차례의 총파업을 벌임으로써 노정간의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7월 27일에 양노총 위원장과 김원기 노사정위원장간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까스로 노사정위원회는 복원·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7월 말에 어

려운 고비를 넘긴 노사정위원회는 8월 5일에 1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및 추진방안을 다루기 위한 4개 소위(‘경제개혁’, ‘고용실업대책’, ‘노사관계’, ‘사회보장’)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는 8월 초부터 7.27 합의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위상 강화방

안을 협의하기 위해 공익위원 중심의 ‘위상 강화’ 소위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으며, 9월초에는 1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공익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사항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수차례 중재단을 파견하여 노사간의 협상에 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3.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의 출범 직후부터 상이한 평가의 시각이 존재하여 왔다. 1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을 둘러싸고 한쪽(경영계와 보수 관료층)에서는 마치 사회 개혁 전반을 주도해 나가는 “혁명위원회”로 자처하고 있다는 낭소적인 비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밀고 가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팽배해짐에 따라 노동계를 포함하는 사회 계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퇴색되어지고 있다.

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반면, 다른 한쪽(노동계의 일각)에서는 “노동자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포섭하려는” 정권의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상반된 시각의 평가는 최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하다.

한편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해온 관료층이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계로서는 노동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였던 지난 시절과는 달리 노동계의 대표와 마주 앉아 정책 현안들에 대해 폐쇄한 협상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기 짜이 없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도 아닌 협의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아무리 요구해봤자 시원스럽게 관철되는 것 없이 정부의 정책추진에 들려라만 서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평가가 높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난 130여일 동안 유지되어온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는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 분명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다. 노동계의 대표가 경영계와 정부측의 대표와 대등한 지위에서 사회 전반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사회적 협의의 공간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드러나듯이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과연 노사정위원회는 어떠한 한계에 놓여 있는 것인가?

첫째로, 노사정위원회의 탄생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던 정부의 신의있는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화급한 외환위기의 불을 끄기 위해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동계로부터 “현찰(정리해고제와 과연근로제)”를 챙긴 연후에 1기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과 이후의 노정합의(6.5와 7.27의)를 통해 노동계에게 약속한 “어음들”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를 취함에 있어 무성의하거나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6월 이후 가시화된 구조조정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

노동계의 요구와 문제제기에 대해 충실히 협의하고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확정된 정책방안을 단순히 형식적인 통과의례로서 밀어붙이는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는 정부내에 ‘압축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밀고 가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팽배해짐에 따라 노동계를 포함하는 사회 제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퇴색되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상의 공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그 활동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세력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운동의 힘 열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됨에 따라 차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상이 형식화하게 되었다. 노동계는 정부로부터 “약속된 어음을 현찰로 되받아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불참을 선언하거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몇 차례의 총파업을 조직하기도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실효성있는 이행조치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양노총의 분열구도에 따른 노동계 내부의 취약한 공조체계, 잦은 총파업전술의 전개에 따른 현장 투쟁력의 소진, 중앙차원의 협상에 걸맞는 지도체계의 미비, 그리고 조직 내부의 복잡한 입장 차

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약되어지면서,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 가는 데에 제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의에 있어서도 노동계는 정부(또는 경영계)의 정책논리에 대항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능력이 미흡하거나, (현행 기업별 노조체계와 관련하여) 주요 단위사업장의 문제들에 얹매여 전체 노동계층(미조직 노동계층을 포함하는)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 차원의 협의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요컨대, 노동운동이 힘있게 받쳐 줄 때에만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가 세 역할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인데, 지난 수개월의 진행 경과에서는 오히려 노동운동의 협상력(조직적 투쟁력과 정책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이 약화되면서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현실적인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가 참여 주체들간의 입장차이, 특히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적인 대립성을 여과하여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타협을 만들어가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협의를 원활하게 유지·운영하기

■ 노동운동의 협상력(조직적 투쟁력과 정책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이 약화되면서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현실적인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위해서는 노·사 그리고 정부간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일정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노사정위원회의 실제 운영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노사간 또는 노정간의 뿌리깊은 불신과 이로 인한 이들 주체들의 경직된 협상자세가 실질적인 타협의 성과를 이끌

어내는 데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실천을 위해서나 이러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정치현실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또 다른 한계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에 대한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유보되었던 점과 노사정위원회의 존립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추진에 대해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전혀 부재하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정치적 현실 여건속에서는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존재나 이를 통한 협상결과가 불안정하게 지탱될 수 밖에 없

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노사정위원회의 미래는?

과연 노사정위원회의 앞날은 어떠할 것인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현 대통령이 없앤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야 노사정위원회는 이대로 존재하겠으나, 현실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앞으로 그 위상과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하듯 노사정위원회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를 다하고 용도폐기되거나 허구화될지, 아니면 노·사·정의 대표들의 대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협의가 제도나 관행으로 정착되어 참여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체제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사회 협의기구로서 발돋움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점치기가 쉽지 않다.

당장, 단기적으로 1기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합의사항들(교원의 노조 결성권과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보장, 공공자금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에 대해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얼마나 성의있는 이행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부문, 금융산업 그리고 민간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노동자들에 대해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따

라서 노사정위원회의 진로는 영향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행조치에 인색할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는 들러리 기구로서 낙인찍혀 무시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를 들러싼 최근의 현실 여건들을 살펴보면 새롭히 실험되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그 역할과 위상이 발전적으로 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첨예한 대립에 휩쓸려 유실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솔직히 크게 찾아 듦다. 실제, 정부는 시장경제 중심의 효율성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모델을 지향하는 '압축적' 구조조정의 정책을 자체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 이후에 노사정 간의 협상을 마치 구조조정의 크나큰 걸림돌로 단죄하려든 보수 언론의 포화 속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조용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또한,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민주적인 참여와 형평의 논리를 힘있게 주장하여야 할 노동운동 조차 그동안 힘을 소진한 듯 풀이 꺼여 있다보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 자체가 맥없이 맴돌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사 또는 노정간의 뿌리깊은 불신이 이

들간의 협의를 원활히 하는 데에 여전히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 노사정 위원회가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속시원한 성과를 낼지 못하는 소모적인 협상의 장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첨첩이 쓰여지는 악조건 속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이와 같이 암울한 전망 속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퇴출을 선포하게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를 탄생시킨 세 가지 조건, 즉 경제위기상황, DJ의 통치철학, 그리고 노동운동의 힘이 현재도 유효하며, 앞으로 이들 조건이 한데 어우러져 노사정위원회의 강화된 역할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이미 대량으로 방출된 실업자들의 생활고 문제가 겨울을 맞아 심각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한 노동운동 내부의 소진된 현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동시에 (양노총간의) 굳건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운동의 힘을 다시금 모아 세울 수 있을 경우에는, 최근의 구조조정에 있어 시장경제주의의 효율성논리에 경도되었던 DJ의 무게 중심이 다시금 사회적 형평과 통합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어음"을 현찰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가 확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힘 실린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현하는 중심기구인 노사정위원회로 옮겨져 다시금 힘을 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급박한 의회 위기 상황 속에서 현 정부가 노동계와의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하여 "사회 협약"을 체결하였듯이 말이다.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지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전

개는 하늘에서 떨어지듯 우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경제적 현실 조건들을 활용하고 또한 변화시켜 나가는 노동운동의 조직적인 힘과 슬기로운 전략에 의해서 실현가능하다고 하겠다. 우선, 단기적으로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어음"을 현찰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가 확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힘 실린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노동계층의 이익 대변을 위한 정책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노사정위원회의 존재를 험있게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어찌보면 노동운동 자신의 몫이라 결론지을 수 있겠다. ♦